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성명	전혜은	직급	전문연구원
		수산연구본부		황산산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인도양 해양거버넌스 및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기본과제)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0.31.)					
출장기간	2026.07.01(수) ~ 2026.07.03(금) (2박 3일)			출장지	일본 도쿄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07.01(수)	부산(09:20) → 도쿄(11:35)		항공 이동		KE1408, KE2129
		오후	일본(도쿄)	스리랑카 주일본 대사관 면담		대중교통 및 도보
	07.02(목)	오전	일본(도쿄)	Seafood Legacy 면담		대중교통 및 도보
		오후	일본(도쿄)	도쿄해양대 면담		
	07.03(금)	오전	일본(도쿄)	사사카와평화재단 면담		대중교통 및 도보
		오후	도쿄(19:20) → 부산(21:35)		항공 이동	
출장성과	○ 출장목적 - 일본의 인도양 해양수산 협력 사례 및 우수 사례 조사 - 한국 특화 인도양 해양수산 협력 분야 도출 ○ 주요 성과 - 주요 협력 대상국인 스리랑카의 협력 현황 파악 - 일본의 인도양 해양수산 협력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제고 - 한국형 인도양 해양수산 협력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기본과제 근거 자료로 활용 예정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우리나라 인도양 해양수산 협력 방안 및 세부전략 도출하는 데 활용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7/01 오후) 일본-스리랑카 해양수산 협력 현황 및 한국의 방향성 조사
수행계획	☐ 스리랑카 주일본 대사관 면담 조사 ○ 일본-스리랑카 간 해양수산 및 항만·해양안보 협력 사례 조사 ○ 한국의 해양수산 ODA 사업에 대한 현지 평가 및 협력 확대 가능성 의견 청취
수행결과	☐ 외부 참석자: 피비투루 자낙 쿠마라싱하(Prof. Pivithuru Janak Kumarasinghe) 주일스리랑카대사 ○ 스리랑카는 서아프리카, 중동, 인도, 호주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해상 항로 중심에 위치하여 물류 허브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음. 스리랑카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물류 허브 개발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임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 항만 용량 확대, 창고 시설 확충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필수적이며, 현재 인프라 개발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음 - 이는 일본과 스리랑카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공고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협력에 있어서도 양국 우선순위가 상호 부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파악됨 - 다만, 국제 규정에 따라 타국과의 협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과는 인프라 자체보다는 기술 협력 및 현대화 측면에서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해양수산 협력에 있어 상업항과 어항의 균형 발전 및 현대화가 고려되어야 함 - 스리랑카 해역에서 약 5만 척의 소형 어선이 활동하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 인구가 종사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수산업은 스리랑카에게 중요한 산업임. 또한, 수산물은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부분임 - 상업항이 '국제 무역'을 위한 것이라면, 수산분야의 어항은 '국내 경제 및 실물 부문'을 지탱하는 축임.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분야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됨 - 한편, 과거 내전과 최근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스리랑카는 기술적으로 다소 뒤처져 있음. 노르웨이나 한국 등 수산 선진국에 비해 어선 수는 많지만 어획량이 적은 이유도 전통적인 어업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임. 이에 수산 및 농업 분야의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기술적 협력과 자본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 ODA 사업 추진에 있어 스리랑카의 행정 시스템, 지식 공유 및 지속가능성 등이 스리랑카의 장점으로 나타남 - 스리랑카는 중앙정부, 주(Provincial), 지방(Regional)의 3단계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음. 영국의 통치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행정 체계가 매우 견고하며, 중앙의 결정이 지방까지 원활하게 전달되는 좋은 조율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이에 향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타 부서나 지방으로 확산시키고자 할 때, 해양수산부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중앙정부에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산하 기관까지 전달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임 - 또한, 스리랑카는 기술을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자체 기술로 발전시키는 모습이 확인됨. 이는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스리랑카만의 강점이며, ODA 사업의 사후 관리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②	(7/2, 오전) Seafood Legacy 면담
수행계획	□ 국제 NGO·기업·정부 간 협력 기반 해양거버넌스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시사점 도출 ○ 일본의 지속가능 수산물 정책 및 민간 주도 수산 거버넌스 추진 국제 사례 조사
수행결과	□ 외부참석자: 야마구치 아이코 부사장, 오가타 유카 비즈니스매니지먼트 팀장, 토야 타츠키 담당자 ○ Seafood Legacy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직접적인 정책 수립보다는 수산 바이어 기업(유통·소매·외식)의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에 특화된 '시장 전환(Market Transformation)' 전문 NGO임 - Seafood Legacy는 2030년까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시장의 대규모 유통에서 'S.E.A. FOOD'(Sustainable-Equitable-Accountable blue food,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수산식품)를 주류화하는 것이 비전임 - 개별 기업 차원의 한계를 넘기 위해 최근 '일본 책임 수산물 라운드테이블(JRSR)'을 출범시켜 10개 주요 기업과 인권실사·이력추적 공통 가이드를 개발 중임 ○ Seafood Legacy는 일본 시장 특성에 맞춘 관계 기반의 점진적 개선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일본 소비자의 지속가능 수산물 인지도는 10~15% 수준에 불과하나, 소비자 수요를 기다리기보다 기업이 '기업 책임' 차원에서 인증 수산물 판매와 소비자 교육을 병행하도록 유도함. 실제 대형마트 이온(AEON)은 2018년 인증 수산물 매출 100억 엔 돌파 이후 매장 내 전용 코너 운영 등으로 시장을 직접 창출하고 있음 - 초밥·튀김 등 엄격한 상품 요구조건으로 인해 식품 공급자 교체가 어려운 일본 시장에서는 "인증이 없으면 거래처를 바꾸겠다"는 서구식 접근이 불가능함. 대신 바이어와 공급자 간 장기 계약과 잦은 방문으로 형성된 신뢰 관계를 활용해 실행 가능한 개선부터 대화로 풀어가는 방식이 유효함 - 기업 조달정책은 IUU 리스크, 환경영향, 인권·노동, 공급망 이력추적의 4대 영역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인권·노동 리스크와 인권실사가 가장 부각되고 있음. 다만 주요 30개사 모니터링 결과 인권·노동에 대해서 약 80%의 업체에서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나, 구체적 목표가 없고, 이력추적이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확인됨 ○ 생산자 직접 지원 중심의 기존 협력과 구별되는 시장-공급망 기반 협력 모델로서 시사점이 큼 - 일본의 인도네시아 양식업 개선 사업은 제품에 소액의 추가 가격을 붙여 소비자 기금을 생산자 개선에 환류하고 NGO 검증으로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구조로, 인도양 연안국 협력사업 설계에 응용이 가능함 - 담당자 교체 시 기존 성과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기업 정책의 공개 문서화 등 책무성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과정에서 연구기관·NGO의 중개자 역할이 중요함 - Seafood Legacy는 활동 범위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 중으로 한국 조직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방한(11월 부산) 의사를 표명하여, 향후 구체적 협력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③	(7/02, 오후) 도쿄해양대 면담
수행계획	□ 일본의 인도양 해양수산 협력 현황 및 우수 사례 조사 ○ 해양안보·IUU 어업 대응·해양환경 관리 관련 일본의 국제협력 사례 확보
수행결과	□ 외부참석자: 류사오보 부학장, 이노마타 히데오 해양정책문화학과 교수·국제해양정책연구소장 ○ 일본의 해양안전·해양 거버넌스 국제협력은 정부 ODA와 민간재단이 결합된 다층 구조로 추진되고 있음 - UN-닛폰재단 해양법 펠로우십은 닛폰재단이 UN에 기금을 기탁하여 개도국 공무원·청년 인재에게 UN 본부와 해외 대학에서의 해양법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인적 역량강화 사업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기구 경유 지원 사례임 - 두 번째로 말라카해협 항행안전 협력은 일본 정부가 ODA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연안국의 항행안전 역량강화를 장기간 지원해 온 사례이며, 닛폰재단도 공동으로 참여하여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 한편, 동남아수산개발센터(SEAFDEC)는 ASEAN과 일본이 협력하여 설립한 수산 양식 분야 개발지원 기구로, 연구와 기술지원·정책이행을 병행하는 조직임. 필리핀, 태국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도쿄해양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개도국 수산개발 지원에 있어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한·일 협력의 접점으로 제시됨 - 일본은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신탁기금을 설치하여 태평양 도서국의 기술 지원 사업에 활용하고 있음. 기금의 활용은 공여국이 아닌 국제기구가 공모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공여국-수원국 간 신뢰 형성에 기여함 - 인도양의 경우 IOTC(인도양다랑어위원회)가 회원국 공여 기반의 자체 신탁기금으로 세이셸 등 개도국 회원의 이행 역량을 지원하고 있어, 한국도 동일한 방식의 공여·협력이 가능함. 이외에 FAO 다자신탁기금, WTO 수산보조금협정 이행지원기금 등 다양한 채널이 존재하며, 일본은 자금 공여와 함께 국제기구에 자국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 정부 간 협력에 앞서 학계 간 협력으로 착수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 방안으로 논의됨 - JICA는 학계·행정·기술 전문가의 혼합 파견과 개도국 연수생 초청(팔라우 공무원 1개월 연수 등)을 결합하여 운영하며, 도쿄해양대도 JICA 연수과정을 수탁하는 등 대학이 협력사업의 실행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 - 정부 간 협력은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나 학계 간 협력은 공동연구·심포지엄 등으로 시작이 용이함. 일례로 도쿄해양대-상하이해양대는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된 KMI와의 세미나 교류 재개 희망도 표명함 - 참다랑어 TAC 지정 등 수량관리 강화와 해수온 변화에 따른 어장 이동 등 기후변화 적응이 한일 공통 현안으로 확인되어, 양국 간 비교연구 등 학술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④	(7/3, 오전) 사사카와 평화 재단 면담
수행계획	□ 일본 민간의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 동향(JICA 대체 방문) - 민간 재단의 인도양 해양수산협력 역할 및 사업 추진 방향
수행결과	□ 외부참석자: 상 까오 사사카와 평화 재단 해양정책연구소 주임연구원 ○ 사사카와 평화 재단은 정부 협력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해양비전.행동부'와 '도서국부'의 2개 부문으로 구성됨. 해양비전.행동부는 북극, 블루이코노미, 거버넌스 등에 대한 정책연구와 정책제언을 수행하고, 도서국부는 팔라우 등 태평양 도서국 대상 프로젝트를 담당함 - 재단 회장의 운영 방침은 "정부가 하지 않는 것,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로, 정부 사업과 중복 없이 보완적 역할에 집중함. 실제 아프리카·도서국 전문가와의 민간 대화를 운영하며, 정부 간 회의를 보완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있음 - 주요 사업 방식은 직접 수행보다 기금 제공과 공모임. 세계해사대학에는 전문가 파견 없이 기금만 제공하며, 'Ocean Shot 연구 그랜트'는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공모형 연구비를 발주하여, 미국·호주·일본 등에서 3~4차례 지원한 실적이 있음 ○ 일본형 어촌 활성화 모델의 해외 이전 등 활동 범위가 인도양으로 확장되고 있음 - 일본 수산청의 어촌 활성화 정책인 '우미교(海業)'(수산업에 관광·문화·식문화를 결합해 연안 지역경제를 재생하는 모델)를 도서국에 소개·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수산청 단독 정책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수산업을 넘어 관광 등 연관 산업으로 연안 지역을 재생한다는 접근은 참고할 만한 사례임 - 한편, 일본의 對도서국·아프리카 지원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과 ODA 정책들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일본 학계에서 FOIP는 구체적 전략이라기보다 지역 리더십을 위한 비전으로 인식되며, 아베 정부 이후 역대 정부로 계승되고 ODA가 주요 이행 수단이 되고 있음. 실제 OPRI는 최근 방글라데시 개발청과 해양수산 MOU를 체결하고 스리랑카·모리셔스 블루카본 연구를 수행하는 등 인도양 연안국 활동을 확대 중임 ○ 올해 4월 KMI와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구체적 후속 협력이 가능함을 확인함 - 재단 측은 MOU 후속 사업 추진 시 도쿄해양대 교수진을 전문가로 초빙하고 재단 소속 연구소의 연구진을 파견하는 등 재단-대학·연구기관 간 3자 협력 구도를 제안함 - 도서국부와 추가 협의 주선 의사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소통 채널 유지에 합의하여, 도서국·인도양 연안국 대상 공동연구 등 실질 협력으로 발전시킬 여지가 큼
	 

* 주요 업무 내용을 10개 내외로 작성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